

김민석 총리 “재정·공공기관 이전, 산업·기업 유치 지원”

민주 광주·전남 통합특위 간담회
“3대 지원 방향 정부안 마련 중”
권역별 발전계획 특별법 요청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견인할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도체 산업 등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 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시도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행정통합은 에너지·산업 대전환 시대에 광주·전남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끌어내고 공공기관 이전, 산업과 기업 유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전략 산업과 RE100(재생에너지만 사용) 산업단지를 유치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산업 대전환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자치분권 강화라는 측면뿐 아니라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 주도 성장으로 방

향을 바꾼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이라며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 시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큰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오는 16일 특별법안을 발표한다”고 확인한 뒤 “김 총리와 광주·전남의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광주권에서는 주로 광역교통망 문제를 언급했다”며 “동부권은 위기의 철강산업에 대한 미래 먹거리, 남부권은 개별적 계획을 한데 묶어 종합 발전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부권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단 유치와 RE100 국가산업벨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했다”며 “농어촌 소멸 문제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강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김 총리는 대통령이 광주·전남 의원 오찬에서 말한 대규모 재정지원, 공공기관 이전 문제 집중, 산업기업 유치·지원 등 3가지 방향에 대해 이미 정부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했다. 김원이 의원의 제공

아울러 “(간담회에서) 요청한 내용은 최대한 특례로 담고 법안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은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최다선(5선)인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사실상 통합은 이뤄졌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의원별로 작성한 뒤 시·도당 위원장에게 제출, 통합 후 정부에 제시하자”며 “이제 정부에서 무엇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근산 기자

전경선 도의원 “행정통합 속도보다 안전장치 우선”

지역경제 공동화 방지 등 제언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속도보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큰 방향과 대의에는 동의하며 적극 지지하지만, 속도전 통합이 아닌 제도적 안전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필요하다”면서도 “현장에서는 흡수 통합으로 전남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예산·인프라의 광주 쏠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러한 우려는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통합을 만들기 위한 뼈아픈 조언”이라며 “통합이 행정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



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 △지역경제 공동화 방지 장치 마련 △전남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공공입찰·조달 의무화 △시·군 단위 공공사업 지역 우선 원칙 △전남 행정청사와 주요 기능의 법적 존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통합과 별개 추진 △예산과 권한의 광주 쏠림을 막는 균형발전 구조 설계 등 6가지를 제안했다.

전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행정의 속도가 아니라 주민의 신뢰에서 완성돼야 하고, 도민의 희생과 지역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문지마 통합은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와 양 시도는 현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안한 안전장치들을 통합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이달말로 연기

당초 계획서 2주 가량 순연
빈틈없는 준비...민주 당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발의가 1월 말로 연기됐다.

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론 수렴과 총출발 법 조문 완성을 위한 조치다.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등에 따르면 당초 이르면 15~16일로 예상됐던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가 1월 말로 늦춰졌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양대 축으로, 파격적 재정 인센티브를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균형발전기금 조성, 산업·기업 유치 인센티브 등 280여개에 이르는 특례를 빈틈없이 준비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 교육청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관련 정부 부처, 정치권과의 밀도있

는 논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선 최소 2주일 가량의 속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렸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시·도청과 양 교육청에서 올린 초안 성격의 법안 건의사항을 토대로 실제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무얼 담아야 할지, 정부 부처와의 협의와 조율, 국회와 시민 공청회 등을 두루 거쳐 알찬 내용을 담기 위해선 기밀한 조율이 필요해 법안 발의는 1월 말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회 공청회에 이어 특례 조항 등 특별법에 대한 국무총리 브리핑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논의되거나 발표된 내용도 입법지원단 회의에서 충분히 고려해 마지막에는 특별법에 담아내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와 전남도, 양 교육청의 통합 관련 특별법안 건의안은 초안 형태로 이르면 이날 안으로 안 의원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위 공

동위원장도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마친 뒤 “16일까지 특별법 발의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시기상으로 법안 발의는 이달 말이나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관계자는 “완성도를 높이지는 차원에서 2주일 남짓 (법안 발의가) 순연된 것으로 안다”며 “이 기간에 국가계획에 담을 것은 담고, 예산에 담을 건 담는 등 사전정치 작업이 기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손질을 앞둔 특별법은 총 8편 24장 317개 조문 281개 특례로 채워져 있다. 앞서 추진된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총 7장, 21절, 296개 조문, 257개 특례로 구성됐다.

한편, 특별법 발의와 제정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는 총리 브리핑에 맞춰 전남 시장군수 상생협의회의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협의회 발족(16일), 지역별 순회 공청회(19-31일), 시·도의회와 시·도민 의견 청취(1~2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제54회

강진청자축제

휴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